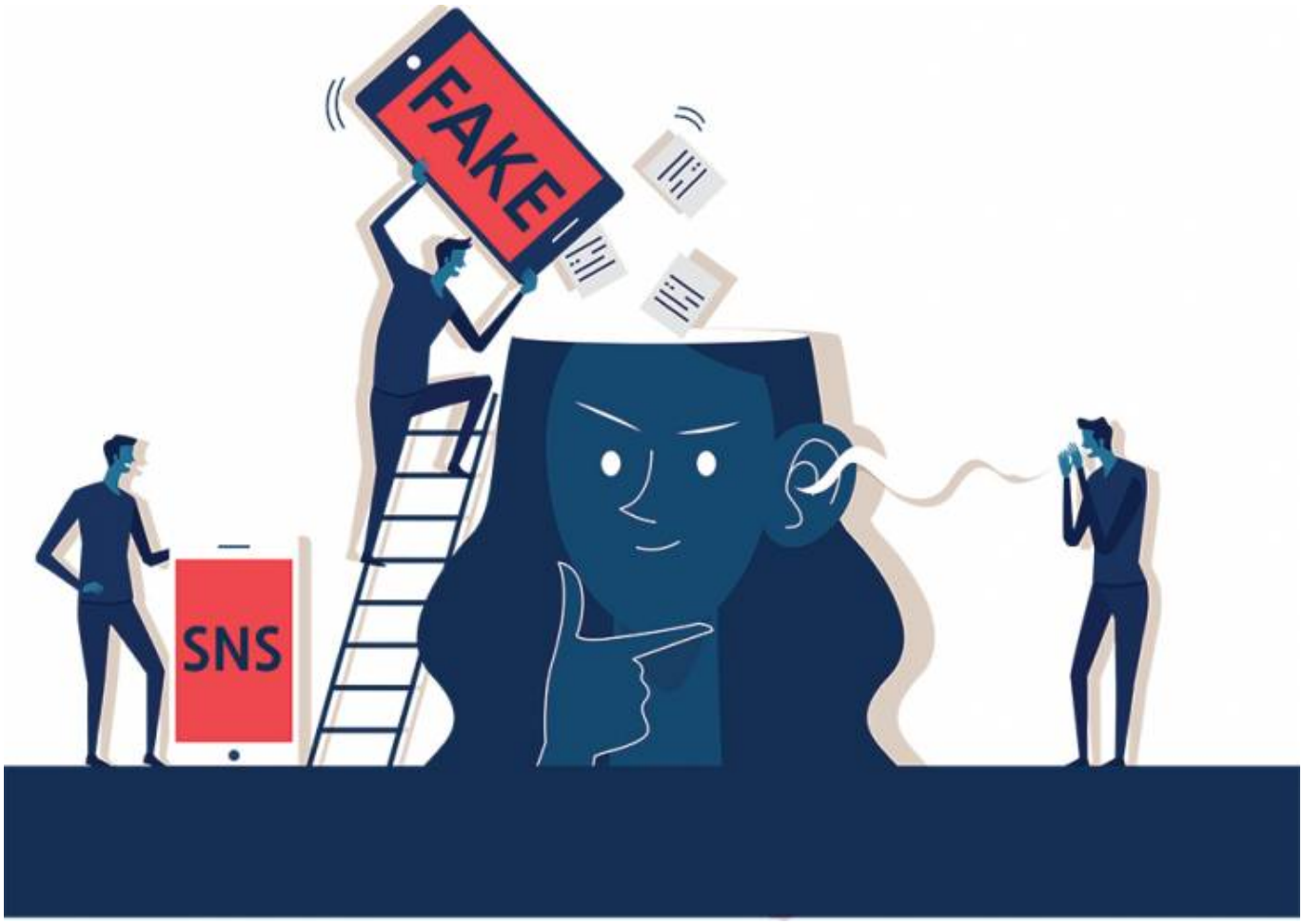


[큐레이션 콕콕] 가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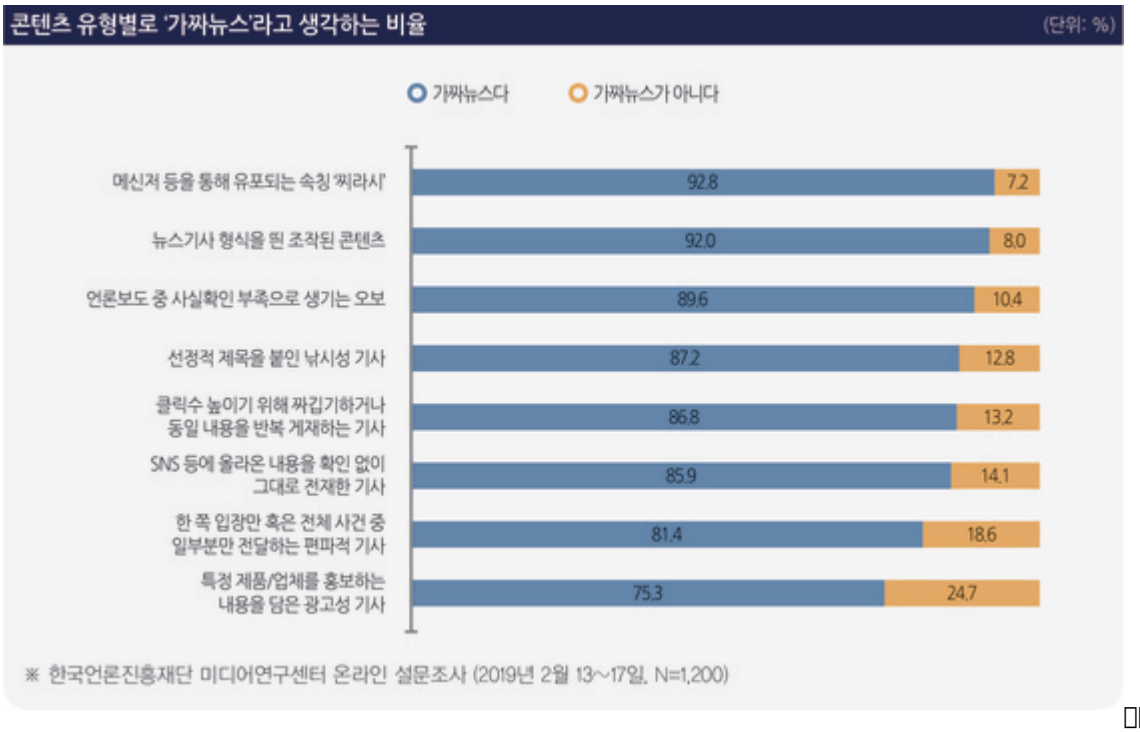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8명은 가짜뉴스에 속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 경로는 페이스북이고, 기타 유튜브나 블로그,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도 널리 퍼져있었습니다.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번진 국가는 미국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는 한국의 성인남녀 1,312명 중 88.8%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언급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가짜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60.6%였습니다.

가짜뉴스는 얼핏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지만, 가짜뉴스 제작 사이트 등으로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꾸며 유통된 것을 말합니다. 기사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악의적인 고의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카더라 통신'이나 '오보'와는 속성이 다릅니다. 자극적인 내용이 다수인 가짜뉴스는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가짜'인 게 밝혀져 정정 보도가 나더라도 진실처럼 믿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경우 없었던 일로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합리적 의심을 통해 거짓과 왜곡된 정보를 골라낼 수밖에 없죠.

출처: 브릿지경제

경제적 이득 때문이든 정치적 목적 때문이든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만듭니다. 또 누군가는 그것을 퍼 나릅니다. 대중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를 접합니다. 진짜와 가짜 정도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요? 제작자와 유포자보다 거짓을 그대로 믿는 대중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기엔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으로 포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가 대중을 현혹하고 팔로워를 늘리는 동안 누군가는 주머니 속의 돈을 날리고, 나라를 이끌 '왕좌'의 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5건 중 4건은 가짜뉴스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정치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내용은 '찌라시'지만 '공신력 있는 기사'로 포장돼 있어 많은 이들이 속을 수밖에 없죠.

일부 국가들은 가짜뉴스 제작과 배포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가짜뉴스 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뉴스를 '허위' 정보로 판단하면 미디어는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유포한 개인은 최대 10년 징역형, 관련 기업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66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독일과 말레이시아,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도 가짜뉴스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AI 유언비어 분쇄기'를 내놨습니다. 정확도가 81%에 달한다고 하네요. 뉴스 배포자가 믿을 만한지, 사용자들이 호감 가는 반응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출처 링크와 IP를 추적해 해당 사이트의 타당성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뉴스를 권위 있는 싱크탱크 데이터와 비교해 내용의 신뢰도를 검토합니다.

지난 6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정보조작의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을 알렸습니다. 협의체는 학계,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가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 가짜뉴스의 핵심으로 정치적 의도성과 비사실성이 지적됐다.

출처: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콘텐츠 유형별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발표했는데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는 속칭 찌라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뉴스기사 형식을 띤 조작된 콘텐츠', '언론보도 중 사실확인 부족으로 생기는 오보', '선정적 제목을 붙인 낚시성 기사',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짜깁기하거나 동일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기사', 'SNS 등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전한 기사', '한쪽 입장만 혹은 전체 사건 중 일부분만 전달하는 편파적 기사', '특정 제품/업체를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 등을 시민들은 가짜뉴스로 꼽았습니다.

미디어연구센터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와 실수로 발생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각각의 보도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 구분하자고 제안합니다. 동시에 언론은 돈벌이 목적으로 생산해내는 질 낮은 기사와 사실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만드는 오보도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로 인식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사 품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출처: 한겨레

가짜뉴스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이쪽 업계(?)의 최신 트렌드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해 가공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난해 크게 화제가 된 '트럼프는 완벽한

멍청이'라고 말하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영상이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동영상에 인물의 얼굴을 프레임 단위로 합성하는 페이스 매핑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화면 속 얼굴이나 목소리 등이 진짜처럼 자연스러워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많았죠.

AI는 꽤 완벽한 가짜뉴스를 만듭니다. 지금은 공익을 위해 계발을 통제하고 있지만, 기술이 진보하고, AI가 가짜뉴스 생산에 악용되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것은 필연적이겠죠.

국내에서는 아직 딥페이크가 논란의 중심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딥페이크 기술이 초보 단계지만 언제 딥페이크가 국내에서 활성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를 막기도 어렵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왜 이토록 가짜뉴스와 거짓 발언들이 범람하는 걸까요.

첫째는 현대 문화의 특성 때문입니다. 정보나 기호, 화폐는 사실에 대한 지시적 기능에서 출발했지만, 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승인을 받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가짜뉴스도 소비 과정에서 점점 뉴스의 자격을 갖게 되었죠.
둘째는 긴 맥락의 서사를 소화하는 대중의 능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재치 넘치는 짧은 문장과 선정적인 정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길고 깊은 설명이 필요하죠.
셋째는 정보 권력의 이동입니다. SNS나 단체대화방 같은 사적 채널로 정보가 빠르게 이동하고 소비되면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실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해>를 펴낸 김아미 씨는 '뉴스 뜯어보기'를 강조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으면 여러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는 데 이때 두 개 이상의 신문을 골라 언론이 같은 사안을 어떻게 같고 다르게 전달하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뉴스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질문하는 것이 뉴스 뜯어보기의 핵심입니다. 하나하나 되짚어 따져보는 거죠.

글 · 이미지 / 이재은(뉴스큐레이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1. 내 의견은 '팩트', 남의 의견은 '가짜뉴스'?
한겨레, 2019.7.15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2. 사람잡는 가짜뉴스의 세계…좀 맞자, 가짜뉴스 백신!
브릿지경제, 2019.7.15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3. [산책자]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이유
경향신문, 2019.7.7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4. <김주언 칼럼>> '가짜뉴스' 보다 무서운 '딥페이크' 주의보
스포츠한국, 2019.7.8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5. [대학생 이슈 리포트 2019] ④가짜뉴스를 만드는 AI, 가짜뉴스를 잡는 AI
IT chosun, 2019.7.7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6. '가짜뉴스' 잡는다…방통위, 허위조작정보 자율협의체 출범
뉴스1, 2019.6.11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7. 인터넷 이용자 86% "가짜뉴스에 속았다"…주로 페이스북
뉴스1, 2019.6.12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